



기후 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2~7, 16면

서방에
더 많은 무기를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7면

현재, 보안법 7조 등 위헌성 변론
보안법 개정론의 문제점
12면

파시스트가
이탈리아 새 총리로
유력
13면



1925~1927년 중국 노동자 혁명
8~10면

기후 위기, 대중에게 더 큰 고통이다

기후 변화를 체제 변화로 해결하자

관련 기사 2~7, 16면





사진 출처: Al-Hyder Jund (유티커)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

유엔 과학기구 협동 보고서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장호중

유엔 산하의 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등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국제기구 6곳이 9월 13일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고 지적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팬데믹 전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등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기면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복원될 수 없는 임계점을 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수천만~수억 명이 기후 재난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고, 수억~수십억 명이 난민이 될 것이다. 기아와 질병, 경제 위기와 또 다른 팬데믹, 전쟁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그런데 공동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영국 기상청이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앞으로 5년 안에 1.5도를 넘길 가능성

이 48퍼센트나 된다고 예측했다.

유엔 산하 기구들의 연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1.5도를 넘기는 시기가 더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이 예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IPCC는 2018년에는 그 시기를 2030~2052년 사이로 예측했지만, 2021년에는 2021~204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긴 바 있다.

보고서는 2022~2026년 사이에 가장 더운 해의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93퍼센트라고 발표했다. 남극의 얼음은 역사상 가장 적거나 두께로 적은 수준으로 녹아 없어졌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후의 임계점을 보여 주는 주요 현상들을 관찰해 왔는데 그중 하나가 유명한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류’(AMOC)다. 이 거대한 해류는 대서양과 인도양, 태평양을 순환하며 열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구실을 하는데, 기후 변화로 이 해류의 흐름이 정체 되면 기후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심지어 빙하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를 소재로 삼은 영화가 2004년에 개봉된 <투모로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이 해류가 지난 1000년 사이에 가장 느려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다른 임계점들 예컨대, 극지방의 용해와 대규모 기후 패턴의 변화, 아마존 열대 우림의 건조화, 몬순(장마, 우기) 같은 주요 기상 시스템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고온 고습으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기술적 지원 없이는 더는 야외 노동이 불가능한 생리학적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주요국 정부들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모두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 파리협약의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전보다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협약이다.

“2021년 11월 4일 현재 각국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전에 비해 진전했지만, 전 세계 배출량 감축 효과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 … 온난화를 2도로 제한하려면 감축 목표는 지금보다 4배 높아져야 한다. 1.5도로 제한하

려면 7배 더 높아져야 한다.”

보고서는 지금대로라면 이번 세기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2.8도나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탄소중립’ 공약을 모두 달성하더라도 세계 평균 기온이 2.1도 안팎으로 오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기후 재난이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빈곤층에게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최근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을 물에 잠기게 만든 홍수처럼, 파괴적인 영향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보고서 발표 후 “이토록 거대한 재난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화석 연료에 중독된 대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석연료 중독”이 인류 전체를 “미지의 파괴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충격적인 경고는 분명히 정치인들과 기업주들을 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인내심을 갖고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들을 성장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장호중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준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후보 시절과 달리 집권 이후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외교 의제로 제시한 마당에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NDC 이행 방안 시행을 한 해 미루고, 2023년 3월까지 수정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다른 정부 정책들을 보면 수정된 이행 방안도 지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NDC는 2015년에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에 따른 조치로 2030년까지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기존에 제출한 목표를 높일 수만 있고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이 목표를 40퍼센트로 높여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기업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산업계에 부과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기업주들이 상당한 비용을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값싼 석탄 대신 가스나 전기로 에너지원을 바꿔야 하고, 각종 배출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소재도 바꿔야 한다. 윤석열이 후보 시절 의기양양하게 목표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조차 이런 조치에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하물며 훨씬 많은 중소기업은 더욱 그럴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시행하려면 강력한 규제와 막대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예산과 그것을 조달할 계획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실상 제스처였던 셈이다. 파리 협약은 각국 정부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벌칙 같은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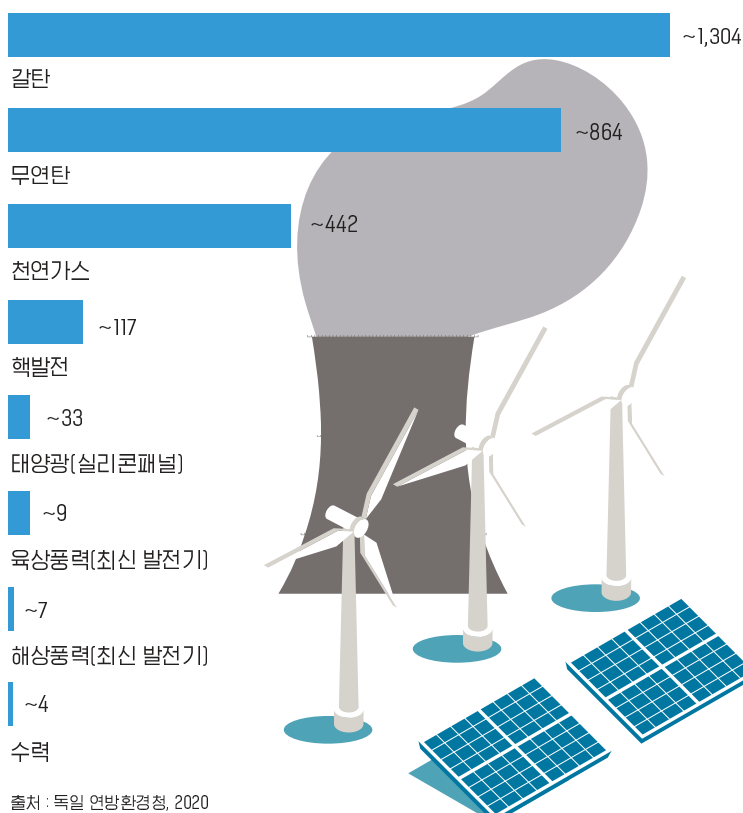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NDC도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과학자들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근거 자료를 공개해 온 과학자들은 인류가 기후 재앙을 피하려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렇게 하려면



핵발전은 기후 위기 대안이 될 수 없다 핵발전소 앞에서 연설하는 윤석열

전원별 전 주기 탄소배출량(gCO2Eq/kwh)



앞으로 몇 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40퍼센트 감축이 아니라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야 하므로 그동안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고 지금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은 더 빨리 줄여야 한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세계 7~8위를 차지하고, 배출 증가 속도에서는 단연 세계 1위다.

그린 택소노미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면 이 정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6년까지의 전력 생산 계획을 담

은 것이다.

먼저 줄곧 예고해 온 대로 핵발전 확대 계획이 담겼다. 곧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6기의 핵발전소 건설을 완료해 총 30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핵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핵발전 확대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짓고 그 원료인 우라늄을 채굴, 운반, 농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화력발전소에 비해 배출량이 적지만, 재생

에너지에 비하면 많다.(그림)

무엇보다 핵발전소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의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지난 40년 사이에만 초대형 핵발전소 사고가 두 건이나 일어났다.(체르노빌, 후쿠시마)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현재 41.2기가와트인 천연가스 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57.8기가와트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36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 전체 발전 설비의 44.4퍼센트나 차지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도 석탄에 비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만 재생에너지에 비하면 엄청나다.(1기가와트시당 499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서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3161억 원 삭감했다. 최근에는 전임 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사업 비리를 캐내겠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 설사 그 규모가 작을지라도 실제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조국 사건에서 보듯 말만 번드르하고 실제로는 기존 통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여 온 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재생에너지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것처럼 왜곡하는 이유는 화력발전과 핵발전을 유지·확대하는 게 기업주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설비를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수많은 기업주의 이윤에 끼칠 타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대가, 즉 기후 재난의 심화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이 지게 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물론이고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양 하던 유럽 정부들조차 핵과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상황이 윤석열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유럽의회는 얼마 전 핵발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 확대를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 ‘세계적 추세는 핵발전 확대’라는 반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의 핵발전 화력발전 확대 정책은 좌절돼야 한다. 그러나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9.24 기후정의행진 함께하자

장호중

9월 24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24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2019년 9월 이후 규모가 가장 큰 기후 집회가 될 듯하다. 이 집회는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로 집회·시위가 제약을 받아 오다 코로나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도 기후 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해 온 반면, 세계 주요 정부의 대처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오히려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초여름 폭염과 가뭄이 북반구 전역을 휩쓰는가 하면 늦여름에 폭우가 세계 곳곳을 덮쳐 홍수가 나고 초대형 태풍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졌고, 유럽에서는 강이 말라 버려 물류 운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강물을 냉각수로 이용하는 핵발전소들이 가동을 멈췄다.

파키스탄에 찾아온 초대형 홍수는 인류 전체가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를 미래를 미리 보여 줬다. 폭염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파키스탄에 7~8월 두 달 동안 평소의 네 배나 되는 양의 비가 왔다. 일부 지역에는 예년보다 466퍼센트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이 이재민이 됐다.

이로 인해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이 사망할 공간이 크다.

홍수로 기반 시설이 크게 파괴돼 수많은 사람들이 식수나 음식도 없이 손상된 건물이나 야외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뱀, 전갈, 모기 등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수인성 질병과 영양실조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견딜 힘도 약해지고 있다.

“100년 만의 폭우”는 한국에도 찾아



2019년 9월 21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만이 지배자들을 강제하고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 줄 수 있다

아 왔다. 8월 초에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차량 수천 대가 침수됐고 지하철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반지하 방이 물에 잠겨 일가족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자신이 사는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을 관찰하듯 쪼그려 앉아 반지하 방 안을 들여다보는 윤석열의 모습은, 사회 상류층 인사들이 기후 재난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잘 보여 줬다.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은 또 다른 사례다. 이 지역에 태풍이 처음 찾아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태풍의 위력이 조금만 커져도 기존의 사회 인프라가 이를 견뎌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계곡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 지

하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려 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물에 갇혀 숨졌다. 한국

에서 가장 큰 공장 중 하나인 포스코의 철강공장이 물에 잠겨 가동을 멈췄다. 고로는 간신히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철관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전기 모터 수천 개가 고장나 복원이나 재건설이나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 대책 없는 주요국 정부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한 바이든은 집권과 동시에 파리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기후 변화 대응 예산은 다른아닌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의 반대로 좌초됐다.

바이든은 기후 위기 대응보다는 중국과의 경쟁에 매달리느라 무역 장벽을 높여 오히려 필요한 자원 공급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엄청난 지원을 쏟아부었고, 이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화석연료 기업들에 증산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가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 기후 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내놓은 약속들이 다 지켜진다

고 해도 기후 위기를 멈출 수 없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졌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진국 정부들이 지난 30년 동안 자신들이 내놓은 약속을 전혀, 혹은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팬데믹 와중인데도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COP26 회담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이유다.

한국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기후 위기 대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기업주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위협천만한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 발전소는 줄인다지만 그보다 많은 천연가스 발전설비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기후 위기의 위협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한국 정부는 이에 진지하게 대처할 생각이 없다.

기후 위기뿐 아니라 팬데믹과 전쟁, 경제 불황의 복합 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가 사력을 다해 지키려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이 아니라 이윤과 자국의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구호는 대중적 운동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924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자.



노동자도 기후 위기에 책임져야 하는가?

전례 없이 심각한 기후 재난이 노동 계급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여름 폭염과 폭우 속에 많은 노동자들이 지옥 같은 환경을 견뎌야 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하며 이런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탈탄소 산업 재편을 명분으로 일자리와 조건을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과 LNG 발전을 대폭 늘리는 전력수급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49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 용역 보고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기차 전환'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던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조건이 위협받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이런 책임 전가에 대한 도전으로서 제기됐다. 즉,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산업들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편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체고용, 생계 지원금, 재취업 교육, 사회보험 등을 제공하자고 한다.

실제로,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폐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해관계

이 같은 정의로운 전환 요구는 지난 몇 년간 광범하게 지지를 넓혀 왔다. 기후정의 운동이 쌓아온 성과다.

그럼에도 운동 안에는 여전히 노동자들에게도 기후 위기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적지 않다. 기후 위기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비용이 조금치도 떠넘겨져서는 안 되는데도 말이다.

노동자들이 소비자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적잖이 있다. 이는 유류세나 전기요금 인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싸고 질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한, 평범한 노동자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기후 위기의 공범이기는커녕, 기후 위기의 피해자이자 그에 맞설 투쟁 잠재력이 있다

들은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적잖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산업의 유지로득을 본다고 본다. 그 분야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우선시해 기후 문제를 외면한다면서 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산업 재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보장을 확고하게 옹호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일부 활동가들은 특히 정규직의 임금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화석연료 산업으로 득을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기후 위기의 피해자이고, 기후 위기 대응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점점 기후 문제로 내몰린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74퍼센트는 석탄발전소 폐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82.2퍼센트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조건이 보장된다면 말이다.

기후와 노동 문제를 대립시키며 이런 노동자들의 절박한 바람을 외면하

면, 노동자들을 화석연료 산업 지키기로 내몰고 기후정의 운동의 잠재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게 될 수 있다.

기후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계급이고, 이들은 이윤 체제를 멈춰 기후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투쟁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연결돼야 한다. 투쟁의 연결, 상호작용 속에서 노동자들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계급투쟁

기후 단체, 노동조합, 좌파 정당들의 대다수 간부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그 실현 방법으로 주되게 정책적·법률적 수단에 무게를 싣고 있다. 운동 내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서 계급투쟁에 대한 강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정의당이 국회에 발의한 법률안이 그렇듯, 사회적 대화와 경영참여를 강조하기도 한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녹색 산업 재편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가령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에게 전기

차 생산과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한다. 그것이 기후 위기 대응에도,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기업 경쟁력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을 모두 전기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뛰어든 것은 사회적 필요가 아니라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그래서 전기 생산도 화석연료에 의존하려고 하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늦추려 하고, 노동자들에게 인력 감축과 조건 악화를 압박한다.

노사(또는 노사정) 협력을 통해 정의를 설득하겠다고 하며 경영참여나 사회적 대화에 매달리면, 노동자들도 일부 희생하라는 압박을 쉽사리 받게 된다.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투쟁의 힘을 약화시킬 위험도 크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려면, 계급 타협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관계를 거슬러 만만찮게 투쟁해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서도 말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존 벨라미 포스터는 정의로운 전환이 "계급투쟁과 필연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어야 하고, "아예 다른 생산양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노동자들이 자동으로 기후 저항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 정치·경제 영역이 서로 분리되는 듯하면서 노동조합 투쟁은 그 투쟁을 경제적 이슈들로만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 활동은 노조 지도자들의 기자회견 참석이나 의회 로비 정도로 여겨진다. 이런 문제는 흔히 노조와 온건좌파 정당의 정치인들에 의해 강화돼 왔다.

노동조합주의와 정치적 개혁주의에 갇히지 않는 전 계급적인 정치와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건설·쿠팡·중공업·학교비정규직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이상 기후 속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 위험에 맞서고 있다.

이는 탈탄소 전환 같은 더 큰 변화를 위한 투쟁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런 발전을 꾀하려면 노동자들의 투쟁을 서로 연결시키고 기후정의 운동과 연결되도록 애써야 한다.

박설

자본주의는 왜 화석연료에 중독됐을까?

장호중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인류의 화석연료 중독”을 지목했다. 정말이지 어쩌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토록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됐을까?

스웨덴의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을 파헤쳤다.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다.

제임스 와트 등이 발명한 초기 증기기관은 인기를 얻지 못했다. 당시 영국의 공장은 대부분 수력을 이용해 방직기 등을 가동했는데, 증기기관은 물레방아보다 작고 효율도 나빴으며, 추가 비용이 들었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일부 자본가들이 증기기관으로 노동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였다.

수력을 이용한 공장은 유량이 풍부한 강가에 지어야 했고, 따라서 도시와는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을 붙잡아 두려면 공장 주변에 정착촌을 지어야 했다. 그러나 증기기관을 사용하면 이미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도시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었다.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공장법 제정도 영향을 끼쳤다. 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죽을만큼 부려먹는 것이 지속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노동자들을 경쟁자보다 더 많이 쉬게 하면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도 잘 알았다.

따라서 경쟁 자본 간에 경쟁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집



체제의 이윤 경쟁 논리 속에 화석연료 사용은 급격히 늘어 왔다

단적 저항은 결정적 압력이었다. 영국 의회는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 하에서 수력을 이용한 공장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전에는 자본가들이 강수량이 풍부한 시기에 공장을 최대한 가동해 가뭄 때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됐다. 반면, 증기기관을 이용하면 매일 똑같은 시간 동안 최대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다.

말름은 화석연료 도입이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찾으려는 인류 공동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처럼 더 효과적 착취를 위한 자본가들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지적한다.

제1, 2차세계대전은 화석연료 이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한 일등 공신이었다. 화석연료는 기동성이 필요

한 군대에 안성맞춤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은 전시에 발전시킨 화석연료 설비들을 민간 자본에게 불하했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에서 석유가 핵심 에너지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적 개입도 이와 연관돼 있다.

개별 기업들의 이윤 축적 경쟁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도록 했다.

더 빨리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면 가장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그래서 효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오늘날 모든 산업국에서 핵심 에너지 기술들은 화석연료 맞춤형이다. 송유관부터 발전 터빈, 내연기관, 도로, 난방장치 등등.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진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화석연료 중독을 끝내지

못한 이유는 기업주들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화석연료에 중독된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자들이고, 그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논리 때문이다.

이 경쟁은 단지 지배자들의 의식이나 욕심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다. 거대한 화석연료 기업들부터 자그마한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은 이 가차없는 경쟁 논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고 망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인 이언 앵거스는 화석연료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겨낼 수 있는 껍질 같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려면 그것이 뿌리내리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유화? 민주적 통제?

일각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들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지난 50년 동안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환경 파괴를 저지른 일부 자본가들이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고 본다.

물론 세계적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격화시킨 신자유주의 정

책들이 환경 파괴를 가속한 것은 사실이다. 민영화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요 에너지기업과 화석연료 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들이다. 한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발전소들은 대부분 국가 소유이고 그 통제 아래 있다.

따라서 소유주를 민간 자본에서 국

가로 바꾸는 것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 자신이 기업 이윤과 경쟁력을 신성불가침의 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이다.

‘민주적 통제’라는 단서를 달아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한 기업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더라도 세계적 차원의 맹목적

경쟁 시스템을 조금치도 벗어나거나 제어할 순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에 관한 결정권은 한줌의 경영진·자본가·관료들에게 있고, 의회는 부차적 구실을 할 뿐이다.

이로부터 두 가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나는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자본

▶ 7면으로 이어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 대리전을 더 잘 수행하려고 더 많은 무기 요구

찰리 김버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최근 전투에서 승리를 이용해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의 종류를 크게 변화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그 무기를 이용해 미국·러시아 제국주의 간 대리전을 훨씬 더 키우려 한다.

이들이 바라는 무기 중에는 그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넘겨주길 주저한 장거리 미사일 체계도 있다.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된 문서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했는데, 거기에는 무기 수십 종이 나열돼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내년에도 공세를 지속하려면 이 무기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중에는 사거리가 300킬로미터에 이르는 육군전술미사일 시스템(ATACMS)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양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지만, 이 첨단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꺼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서방과 러시아의 더 큰 충돌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공세적 작전”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요구 사항에는 29종의 무기 체계와 포탄이 포함돼 있다.

그중에는 전차, 드론, 포격 체계도 있다. 우크라이나 장성들은 대함 미사일 ‘하푼’과, 미국이 기존에 제공하던 하이마스(HIMARS,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에 쓸 로켓 2000발을 추가로 받고자 한다. 하이마스는 최근 있었던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확대하면 더 큰 유혈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9월 12일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직 인사는 지난주에 발표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패키지 두 건을 언급했다. 이 패키지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더 많은 무기를 퍼 주겠다는 이와 같은 결의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더 장기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새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과 맞물렸다.

이 보고서의 집필을 의뢰한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였다. 나토 전 사무총장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과 젤렌스키의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마크가 이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영국·캐나다·폴란드·이탈리아·독일·프랑

스·호주·터키와 북유럽 국가들, 발트3국, 중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법적·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즉,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양자 조약을 맺어서 나토 회원국과 다름없는 대(對)러시아 선봉대 구실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전쟁에서 위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은 자국 군대를 보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영국·미국의 병력과 전투기가 러시아 군과 직접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미국과 나토 대리자 구실과 서방에 대한 종속도 강화될 것이다.

9월 13일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

면,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추진한 것은 영국과 미국이었다. 애초의 공격 계획에 따르면 사상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방이 무기 등을 추가 지원해서 형세가 바뀌었다.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영국·미국·우크라이나가 새 계획을 함께 점검했고, 이를 다시 모의 실전 훈련으로 검증했다. 이 작전이 실현 가능하고 젤렌스키의 바람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데 세 나라의 인사들 모두가 동의했다.”

이런 보도는 보수당 정부하의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인된 전쟁광임을 보여 준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3호 / 번역 김샘

▶ 6면에서 이어짐

주의의 이러저러한 측면들뿐 아니라 체제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체제 자체에 도전할 힘을 동원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노동자계급에게만 있다.

다른 하나의 결론은 지배자들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조만간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물가 폭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는데 말이다. 소비가 기후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면 이런 문제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 기후 위기 해결과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좌파적 대안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러분 당장 시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연대 TV



10부작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아시나요?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

이정구 중국 경제 전공자

이 기사는 9월 15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중국에서 벌어진 혁명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1949년 마오쩌둥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사건을 생각한다. 물론 1949년에 벌어진 일도 혁명이다. 마오쩌둥의 좌파 민족주의 세력이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한 민족해방혁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고, 노동계급이 주도하지도 않았다.

이와 달리 1925~27년에 벌어진 중국 혁명은 노동자 혁명이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영향력하에 있던 중국에서 노동계급은 반제국주의 요구와 자기계급의 고유한 요구를 결합해 투쟁하면서 사회 변혁의 주도 세력으로서 잠재력을 보여 줬다.



1925년 파업이 여러 대도시로 번졌고, 특히 홍콩에서는 이중권력 상황까지 나아갔다

20세기 초반 중국 상황과 노동운동의 성장

1925~27년 중국에서 노동자 혁명이 어떻게 분출했는지를 알기 위해, 20세기 초반의 중국 상황을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겠다.

중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청조는 제국주의 확장을 저지하는 데 무능했다. 1911년 민족주의 봉기인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무너졌지만 중국 자본가 계급은 새 중국을 건설하지 못했다. 자본가 계급과 그 정당인 국민당은 광저우와 홍콩 등지에서만 기반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역 군벌들이 나눠 장악하고 있었다.

중국 지식인들은 제1차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이 장악하고 있었던 산둥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파리 강화조약에서 서방 열강은 이 지역 지배권을 신흥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에 넘겨줬다. 게다가 북경의 군벌 정권이 이미 1915년에 산둥성 지배권을 일본에 넘겨준 사실(21개 조약)이 폭로되면서 분노가 폭발했다.

이를 배경으로 1919년에 5·4운동이 벌어졌다. 학생들의 전국적 항의로 시작된 5·4운동은 수많은 대중을 투쟁으로 끌어들이었다. 5·4운동은 노동

계급이 조직된 세력으로 투쟁에 나선 최초의 사건이었고, 1925~27년 혁명의 전조였다.

1919년 당시 중국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근대적 국민국가로 통일되지 못한 채 지역 군벌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농촌에서는 여전히 지주 세력이 강력했다. 그럼에도 동남부 연안에 있는 서방 열강의 조차지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고, 덕분에 노동계급이 급성장했다. 1920년대 초반에는 농촌에서도 농민 운동이 벌어져 농민협회 등이 여러 지역에서 조직됐다.

노동자와 농민 운동의 고양을 배경으

로 1921년에 중국공산당이 창당됐다. 창당 주역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볼셰비키에 큰 영향을 받았다. 중국공산당은 창당 초기에 당원이 57명에 불과한 선전그룹에 지나지 않았지만, 홍콩·광저우·상하이 등지에서 벌어진 노동운동과 관계를 맺으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1920년대 초반 중국에서는 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특히 홍콩, 광저우, 한커우, 우한, 상하이 등지에서 두드러졌는데, 1925년 5월 30일 운동은 그 절정이었다.

상하이의 일본인 소유 공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살해된 것이 발단이었

는데, 이 항의는 점점 확산돼 6월 13일에는 13만 명이 참가한 파업이 벌어졌다. 몇 주 동안의 이 항의 운동에 전례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제 노동계급은 단지 운동의 일부가 아니라 운동을 이끄는 세력이 됐다.

이 운동은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베이징에서 30만 시위가 벌어지고 광저우와 우한 등 주요 도시에서도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상하이에서 시작된 노동자 투쟁은 홍콩에서는 이중권력 상황으로까지 나아갔다. 홍콩의 노동조합 총연합체인 홍콩총공회가 6월 19일 전면 파업을 호소했고, 7월에는 5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영국 경찰의 발포로 52명이 죽고 100여 명이 다치자 홍콩총공회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파업 노동자들의 조직인 '파업노동자 대표회의' 집행위원회는 파업 참가자들의 식사와 주거와 여가까지 조직했다. 또, 주간 신문과 노동자들을 위한 학교를 개설했고, 규찰대 수천 명을 조직해 내부 치안도 담당했다. '파업노동자대표회의' 집행위원회는 사실상 중국 최초의 소비에트였다.



1919년 5·4 운동은 혁명으로 가는 전조였다

계급 갈등의 증대와 중산함 사건

노동자 투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쑨원이 이끄는 국민당과 중국의 자본가 계급은 모순에 봉착했다. 중국 자본가 계급은 처음에는 5월 30일 운동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외국인 공장에 비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자선들의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언제든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다. 국민당은 노동자 투쟁이 부상하자 좌우파로 분열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제스의 쿠데타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함 사건이 벌어졌다. 1926년 3월 20일 황포군관학교 교장이던 장제스는 공산당원이 자신을 소련으로 납치하려 했고 공산당이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고 주장하며 계엄령을 발표했다. 장제스는 홍콩의 '파업노동자대표회의' 집행위원회와 광저우의 노동조합을 탄압했고, 소련 고문단을 감금했다.

당시 공산당은 국민당 입당을 통한 통합인 제1차 국공합작을 추진 중이었는데, 소련공산당과 코민테른 지도자인 스탈린과 부하린은 장제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라고 중국공산당에 지시했다.

스탈린은 서방 언론들이 장제스의 쿠데타 사실을 폭로하자 '국민당과의 혁명적 동맹을 깨뜨리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코민테른의 대표로 중국에 온 스탈린의 수족 미하일 보로딘은 공산당이

'초좌파적 활동'으로 장제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문제라며, 장제스의 요구대로 소련 고문단을 본국 송환하고 중국공산당원 명단을 국민당에 제출했다.

1920년대는 중국 자본가들에게 황금기였다. 전후 소비재 소비가 늘면서 이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 투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홍콩·광저우·상하이의 군벌은 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장제스가 나타나 노동자들을 짓밟았던 것이다. 불안하던 자본가와 지주들에게 장제스는 구원자처럼 보였다.

중산함 사건 이후 자본가와 지주들은 기가 살아서 조직폭력배나 무장단을 동원해 노동조합과 농민 단체를 공격했다. 중국공산당은 방어를 위해 소련 무기를 요청했지만, 보로딘은 이를 거부하면서 "지금은 공산당이 국민당에 머슴처럼 봉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산함 사건으로 국민당 내 주도권을 쥔 우파 장제스는 지역 군벌들을 제압하고 국가를 통일하고자 북쪽 군벌을 정벌하는 북벌을 추진했다. 군벌을 제거하면 지주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농민들은 장제스의 북벌을 환영했고, 덕분에 장제스 군대는 파죽지세로 북상했다.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운동 덕분에 반제국주의와 군벌 제거의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1887~1975)

상하이 노동자 혁명

노동자 투쟁은 1925~26년 홍콩과 광저우에서 다시 상하이로 옮겨가면서 고양됐다. 1927년 2월 19일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상하이총공회는 장제스 군대의 진격을 기다리면서 노동자 35만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장제스와 북벌군을 지지한다", "군벌 쑨완팡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장제스 군대는 상하이로 진격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상하이 주둔군 사령관 리바오장과 외국 조계 경찰들 그리고 두웨성 같은 강패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거리에서 전단을 뿌리던 학생과 파업 노동자들을 그 자리에서 참수하거나 총살했다. 그리고는 참수된 희생자의 머리를 전신주 꼭대기에 매달아 전시하거나 큰 소

반 위에 올려놓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리바오장의 학살로 파업 투쟁은 패배했다.

그러나 상하이 노동자들은 한 달 뒤인 3월 21일 다시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50~8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봉기 계획이 신중하게 결정됐고, 훈련된 5천 명의 규찰대가 봉기의 선두에 섰다. 당일 오후 2시가 되자 기차역과 경찰서 등 상하이 주요 시설들이 봉기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왔다. 다음 날 상하이 북역에 백기가 나부꼈고 상하이 지역 대부분을 파업 노동자들이 장악했다.

장제스는 며칠이 지난 3월 26일이 되어서야 상하이에 들어왔다. 상하이의 자본가들은 파업과 봉기를 일으킨 노동

▶ 10면으로 이어짐

온라인 토론회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마르크스주의 관점

노동자연대 TV

중국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이 며칠이 멀다 하고 벌어집니다. 홍콩 항쟁, 마중 무역전쟁, 위구르인 탄압, 중국 학생 시위, 그리고 최근 대만해협 위기까지. 10월 중하순에는 시진핑 3연임이 예고되고 있죠.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인가요? 노동자연대TV는 이런 분들을 위해 현대 중국의 역사적 사건과 쟁점, 그리고 중국 사회 성격을 살펴보는 시리즈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세계가 격동에 접어들어 지금,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를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갖고 싶다면, 지금 시리즈 토론회를 신청하세요.

발제자 **이정구**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중국 문제를 탐구해 온 전 한신대 강사, 중국 경제 전문가

#	토론회 주제	일정/링크
01	알고 있나요?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	▶ 지금 시청 가능 youtu.be/nj3F4cPdJ2Y
02	중국 혁명(1925~27년)과 트로츠키	9월 22일
03	1949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 지금 시청 가능 youtu.be/nAPnKsYKBg8
04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 - 신화와 진실	10월 18일
05	중국의 소수민족(티베트, 위구르)과 저항	10월 25일
06	덩샤오핑과 개혁·개방	추후 공지
07	텐안먼 항쟁과 그 후	추후 공지
08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추후 공지
09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추후 공지
10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추후 공지
11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추후 공지
12	중국 트로츠키주의의 역사	추후 공지

지세한 내용 보기 및 참가신청
<https://bit.ly/on-china>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가능)

TALK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노동자연대TV에 오시면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9면에서 이어짐

자들의 위력을 봤고, 장제스의 군대만이 대중운동을 분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상하이 노동자 50만 명이 봉기에 참여하면서 무장했고, 수천 명의 노동자 규찰대가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제스 군대 3천여 명으로는 노동자들을 당장 분쇄할 수 없었다. 더구나 장제스 군대의 일부는 봉기를 일으킨 노동자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자본가 단체인 상공회의의 대표들은 장제스 주변에 모여들어 거액의 지지금을 제공하며 서서히 움직였다. 장제스는 상공연합회 같은 온건 노동조합연합체를 구성해 상하이총공회에 맞서게 했고 비밀리에 두웨성 같은 깡패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공격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이런 상황에 아무 대비가 없었다. 당시 코민테른을 이끌던 부하린과 스탈린은 중국 혁명은 ‘자본가 계급이 이끌고, 민족자본가-노동자-농민-학생 4자 연합에 의해 수행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봤다. 그래서 장제스의 군대를 혁명군으로 여겼고, 장제스의 상하이 입성이 중국 혁명의 새 국면을 열었다고 봤다.

스탈린은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말했다. “장제스는 규율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우파와 좌파 그리고 공산당의 연합이자, 일종의 혁명적 의회입니다. 장제스가 왜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파가 우리를 따르는 상황에서, 왜 우파를 내쳐야 합니까?”

그러면서 코민테른과 소련공산당은 중국 노동자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봉기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설득해 무기를 장제스에게 넘겨주거나 무기를 숨겨서 불필요한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중국공산당에 지시했다.

중국공산당과 그들이 지도하는 상하이총공회는 장제스, 은행가, 산업 및 상업 자본가들과의 연합에 사활을 걸었고, 그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것은 봉기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는 행위였다. 심지어 4월 4일에는 총공회가 파업을 자제하는 일련의 규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장한 노동자들이 상하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중국공산당은 계급연합 전략을 추진하면서 노동계급의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1927년 4월 장제스의 쿠데타로 상하이 노동자들이 잔혹하게 학살됐다

장제스의 반혁명과 쓰디쓴 교훈

1927년 4월 12일 새벽 4시, 장제스의 쿠데타가 시작됐다. 일부 지역에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금세 쿠데타군에 의해 제압됐고, 규찰대와 지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다. 하루 동안만 수백 명이 살해됐다.

중국공산당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호소했고, 쿠데타 다음 날인 4월 13일에 노동자 10만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상하이에서의 세력 관계를 역전시킬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중국 노동자 투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장제스의 쿠데타로 상하이 운동은 일격을 당했지만, 혁명적 분위기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주요 도시들의 노동자 조직들은 파괴되지 않았고, 농민 투쟁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코민테른과 그 지시하의 중국공산당은 상하이에서 실패한 전략을 돌아보기는커녕 우한에서 그대로 되풀이했다. 스탈린은 우한의 국민당 좌파 정부가 혁명의 중심이 됐다고 선언했고, 노동자와 농민이 군벌과 제국주의에 맞서 이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당 좌파 정부의 수장 왕징웨이는 공산당을 배신하고 7월에 장제스와 제휴했다. 스탈린은 중국공산당을 또 다른 부르주아 정당인 국민당 좌파에 종속시킴으로써, 또 노동계급의 이익을 민족적 단결이라는 신화에 종속시킴으로써, 중국 혁명을 전진시킬 절호의 기회를 내버린 것이다.

당시에 트로츠키는 중국공산당이 국민당 좌파에게서 독립하고, 그들 자신의 무기와 조직과 힘에 의존해야 하며,

국민당 좌파가 아니라 농민과 연대해 혁명적 열기를 모아 소비에트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노동계급이 반제국주의 과제와 자기 고유의 이익을 결합해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주장이 노동자 대중에게 알려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코민테른과 스탈린, 중국공산당의 과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광저우·상하이·우한에서 기회주의와 타협주의로 입은 손상을 일거에 만회할 심산으로,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험주의로 나아갔다. 1927년 하반기에 준비도 되지 않은 추수 봉기와 광저우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광저우의 노동조합 연합체는 1926년에만 해도 20만 명을 거느린 강력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장제스의 중산함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뒤로 노동자들은 수동적 방관자로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이 일으킨 광저우 봉기는 노동자들의 눈에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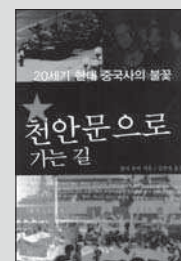
광저우 봉기를 주도한 코민테른 파견자는 이 봉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중에 실토했다. 그런데도 코민테른과 소련공산당 지도자 스탈린과 부하린은 중국 혁명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덮고 트로츠키의 통합반대파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봉기를 일으켰다. 소련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중국 혁명을 장기판의 졸처럼 이용한 것이다.

중국은 1925~27년 혁명을 통해 제2의 러시아가 될 수 있었다. 중국 노동자들은 그런 잠재력을 보여 줬다. 그러

나 스탈린과 부하린의 과오 때문에 중국 혁명은 패배하고 노동자들은 학살당했다. 부르주아 혁명을 거친 다음에야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계론, 노동계급의 독립성을 내버리고 자본가 계급에 종속시킨 계급연합, 준비되지 않은 봉기를 일으켜 남아 있던 공산당 조직과 지지자들을 궤멸시킨 모험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 이어서 중국 혁명에 관한 트로츠키의 평가, 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다룰 예정이다.]

📖 추천 책



천안문으로 가는 길

20세기 현대 중국사의 불꽃

찰리 호어 지음, 김희정 옮김, 263쪽, 10,000원, 책갈피



중국 혁명의 비극

해럴드 로버트 아이작 지음, 정원섭·김명환 옮김, 688쪽, 숨쉬는책공장(절판)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정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0퍼센트를 넘어서면 재정 적자 비율을 2퍼센트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6퍼센트로 제시했다. 재정준칙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를 적용한 셈이다.

재정준칙 법안 제정은 윤석열 정부만 시도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자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키려 한 바 있다.

사실 역대 한국 정부들은 이미 재정준칙에 따라 재정 지출을 억제해 왔다.

1990년 이래 한국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퍼센트를 넘어서면 IMF 외환위기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사태뿐이었다. 이때를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흑자이거나 1퍼센트 내외의 적자를 기록하는 정도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규모(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건강보험 지출액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 지출까지 포함한 것)는 31.1퍼센트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2020년). 마찬가지로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0.8퍼센트로 OECD 평균인 19.8퍼센트의 절반밖에 안 된다(2019년).

역대 한국 정부들이 재정 지출을 극도로 억제해 온 데다가 특히 복지 지출에 매우 인색했던 것이다.

공격적 복지 삭감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격적으로 긴축을 해 복지를 줄여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했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노인 복지 성격이 강한 노인 일자리 예산도 1000억 원이나 삭감돼 월 27만 원을 받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도 사라진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의 90퍼센트가 70대 이상인 것을 감



9월 16일에 열린 금융노조 파업 집회 5년간 60조 원이 넘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삭감하려 한다

안하면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텐데 말이다. 또,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내년 공무원 임금을 1.7퍼센트 인상해,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이처럼 노동자·서민 지원은 대폭 삭감하면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소득세·종부세를 60조 2000억 원이나 감면해 주려고 한다.

게다가 최근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안상훈은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복지 분야에서 민영화를 확대해 기업과

부유층에게 부를 늘릴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재정준칙은 복지 삭감을 노린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된 1990년대 초에 미국·유럽 등지에서 강도 높은 재정준칙을 시행했다. 그 결과 복지 지출이 억제되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전 세계적으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세계 지배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재정준칙을 내팽개쳐 왔다. 예를 들어,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을 살리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런데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재정 적자 문제가 커지자, 2010년경부터 긴축 정책을 본격화해 다시 복지와 임금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반대’라는 구호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도 했었다.

최근에도 코로나19와 함께 세계적 불황이 닥치자 각국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2008년 위기 때 이상으로 돈을 쏟아부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가 급증하자 긴축 재정으로 그 고통을 떠

넘기는 공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최근 무역 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환율이 급등하며 금융 불안정성도 높아지자, 재정 긴축으로 그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러나 긴축 정책은 경제를 살리는 데도 거둬 실패해 왔다. 경제 위기 시기에 긴축 정책은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켜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은행이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통화·재정 긴축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까닭이다.

이미 실패한 재정준칙을 다시 법제화하려는 것은 경제를 살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에게 고통을 가할 뿐이다. 기업과 부유층 지원에만 힘을 쏟는 정부에 맞서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강동훈

**세계 지배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재정준칙을 내팽개쳐 왔다.
그런데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재정 적자
문제가 커지자,
긴축 정책을 본격화해
다시 복지와 임금을 삭감했다.**

용어설명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한다.

이번 위헌 재판은 2017년 이후 접수된 11건의 위헌소원 등이 병합돼 열린 것이다. 위헌 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9명이 공동 대리인단을 꾸렸고, 합헌 측은 법무부가 대리인단을 꾸렸다.

지난 30여 년간 늘 그랬듯이 법무부의 핵심 주장은 국가보안법이 과거와 달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오·남용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들을 열거했다.

그러나 이번 위헌 재판 자체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접수된 사건들이라는 점만 봐도, 법무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심지어 이 11건 중에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넣은 위헌제청 두 건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의 주장은 또한 (최종 무죄가 나왔더라도) 검찰의 국가보안법 기소 행위 자체가 국가권력의 횡포임을 가리려는 수작이었다.

국가 안보 논리의 약점

그런데 법무부 측이 이처럼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은 민변 대리인단 측 논리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함이었다.

민변 측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물 소지’를 국가보안법 7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적으로 위험이 현존할 수 있음이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7조의 처벌 대상 중 표현물 ‘소지’와 나머지 ‘전파’ 행위를 구분해, 후자와 달리 전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운반·반포·판매 등에 대한 처벌은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

는 것이다.

과연 이런 관점으로 최근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는 출판사와 북한 연구자를 방어할 수 있을까?

민변 측이 강조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논리는 ‘무엇을 위험으로 볼 것인가’를 모호하게 남겨 뒀으므로 국가보안법 반대 논거를 취약하게 만든다. 가령 이 논리로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존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임이 분명하므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는 지배자들에게 이용되기 쉽다. 지배자들은 이 논리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용해 왔다. 헌법상 명시된 여러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게 해 주는 헌법 37조 제2항이 대표적이다. 이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가보안법을 실천에서 헌법보다 상위의 법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 준다.

국가보안법에 일관되게 반대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나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

7조만?

민변 측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논리를 수용한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논리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안보 논리에 타협하면, (7조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제거한) 국가보안법 자체는 필요하다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법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변 대리인단은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국가안보 위협 세력을 처벌할 수 있으니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형법의 내란죄 조항을 염두에 둔 언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형법상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를 이용해 이석기 전 의원 장기 수감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이라는 폭거로까지 나아갔던 바 있다.



공개변론 날 헌재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의 기자회견

한편, 이번 위헌 소송 중에는 2조에 관한 것도 있었다. 그런데 민변 대리인단은 7조만 두고 다뤘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내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지난 30여 년간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서 ‘7조 폐지’로, 7조 폐지에서 또 ‘7조 일부 개정’으로 후퇴해 왔다. 7조만 문제인 것도, 7조와 다른 조항 사이에 만리장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이적단체’(7조)와 ‘반국가단체’(2조) 사이에 법리상의 근본적 차이는 없다. 사노맹은 반국가단체였다가 (김영삼 정부 등장 후) 이적단체로 성격 규정이 완화됐다.

민주적 권리 방어는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국가보안법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 온 자민통계 활동가들이 법 일부라도 손질해 탄압을 줄이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 받아 온 고통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남한 지배자들의 매우 유용한 무기이다. 체제의 존속이 쟁점이 될 만큼 강력한 노동계급 대중 투쟁이 펼쳐질 때 비로소 지배자들은 이 무기를 마지못해 일시 포기할 것이다. 양보해서 법 일부만 바꾸자고 하면 지배자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김대중 정부 이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현실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운동의 요구 자체가 후퇴해 온 과정은 주로 민주당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속에서 이뤄졌고, 대중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수동화시키는 방향이었다.

공개변론에서 한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처벌 건수가 시기마다 오르내리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이냐고 양측에 물었다. 민변 측 대리인단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사법 기관들의 태도가 바뀌어 국가보안법 처벌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진보 정권에서도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반박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마음만 먹었으면 폐지할 수도 있었지만 논쟁 끝에 존치하기로 했다”며 민변 측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실제로 김대중은 집권 기간에 보안법 위반으로 3일마다 두 명꼴(총 1164명)로 구속했고, 노무현은 2003년 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던 약속을 내팽개쳤다. 오히려 이들 민주당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안이나 대체입법안을 내놓으며 개혁주의자들을 달래고 포섭하려고 했다(결과적으로 사기극으로 끝났다).

국가보안법 처벌 건수가 200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줄어든 것은 민주당 정권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민주적 권리가 옹호돼 온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민주적 권리 방어의 동학은 지금도 유효하다. 전투적인 노동계급 운동과 비종파적인 혁명적 조직의 강화가 핵심이다.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동시에, 기층 운동을 활성화하고 폭넓게 연대하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보안법 무기를 녹슬게 만들 수 있다.

김승주

이탈리아 총선

100년 만에 다시 파시스트 총리 등장 유력

사이먼 바스케터

파시스트인 조르자 멜로니가 9월 25일 총선에서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이 유력하다. 그런 멜로니가 한 이주민이 여성을 강간하는 동영상 SNS에 공유했다.

다른 정당들이 이를 비판하자 멜로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도시의 안전 문제가 걸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당신네들이 최근 몇 년간 시행한 터무니없는 이민 정책 탓도 있다.”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당은 악독한 반(反)이주민 공약을 내걸었고,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반대했으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

반(反)이주민

이탈리아형제당은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려고 이민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멜로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팔고, 조직 범죄에 가담하고, 성매매를 하려” 이탈리아로 이주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형제당은 전임 연립정부가 긴축을 추진하다 붕괴했을 때 긴축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제 그 득을 보고 있다. 이탈리아형제당은,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동맹당,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당과 함께 하는 강경 우익 연립정부를 주도할 듯하다.

이들 우익 연합은 다가올 총선에서 약 46퍼센트를 득표할 듯하다. 이들은 자기네 중 최다 득표한 정당이 다음 총리를 지명하기로 합의했다. 이탈리아형제당은 “하느님, 조국, 가족”을 구호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출생률을 높여 “이탈리아인의 멸종”을 막는 것이 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멜로니는 이탈리아형제당의 불꽃 모양 로고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는 이탈리아형제당의 뿌리가 이탈리아사회운동당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탈리아사회운동당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무솔리니 추종자들이 창당했는데, 그 당의 로고도 불꽃 모양이었다. 멜로니는 무솔리니를 이렇게 찬양했다. “무솔리니가 한 일은 모두 이탈리아를 위한 것이었다. 무솔리니 같은 정치인은 지난 50년간 없었다.”

이탈리아형제당 인사들은 파시즘



사진 출처 Vox Espana(멜로니)

자신의 당이 무솔리니 지지자들의 당에 뿌리가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파시스트 조르자 멜로니

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2019년에 마르케주(州) 주지사 프란체스코 아콰롤리는 같은 이탈리아형제당 소속 시장들과 함께 무솔리니 집권을 기념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지난달에 멜로니는 파시즘과 단절하겠다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멜로니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 말했지만, 이탈리아어로는 말하지 않았다.

베를루스코니는 2013년에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후 처음으로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전진이탈리아당은 3당 연합 중 가장 세가 약하며, 최근 당이 쪼개지기도 했다.

봉쇄

마테오 살비니의 동맹당은 멜로니와 죽이 잘 맞는 파트너다.

살비니는 내무장관 시절 이주민 캠프를 폐쇄하고 이주민이 탄 배가 입항하지 못하게 막았다. 동맹당 역시 인종차별적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2018년 총선 때 거의 3분의 1을 득표해 선거에 승리했던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은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1퍼센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성운동은 현재 어떤 연합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오성운동은 극우 정당 동맹당과 연정

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연정 파트너를 민주당으로 교체했고, 결국 연정이 붕괴할 때까지 연정의 일부였다. 연정이 무너지면서 오성운동도 분열했다.

이탈리아형제당을 제외한 모든 대규모 정당들이 지난 연정에 참여했었다. 이 때문에 좌파·우파 모두 평판이 나빠졌다.

중도 정당들과 좌파 정당들은 집권했을 때 긴축을 시행하려다 거둬 실패했다.

실패

의회 내 좌파들은 지난 10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더 많이 전가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이를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드라기가 총리를 지냈던 이번 연정 역시 긴축에 실패했다.

그 정치적 공백을 이제 극우가 메울려 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기금에서 2000억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전에 유럽연합이 구제 기금을 지급할 때는 긴축 정책 시행을 전제로 했다.

멜로니를 비롯한 우익들이 유럽연합 비판을 삼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탈리아 강경 우익이 대개 친(親)푸틴 성향인데도 이탈리아형제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지지하는 이유 중 일부도 이것이다. 반면, 예컨대 살비니는 아

직도 푸틴에게 친화적이다.

새 정부는 누구보다 이민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저들을 저지하려면 선거가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822호 번역 최병현

▶ 추천 영상



유럽의 새 극우파시즘

📖 추천 소책자



파시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레온 트로츠키 지음 최일봉 옮김
노동자연대, 74쪽 3,000원

노동자연대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workerssolidarity.org/join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당시증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해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64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5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무려 22개월간 불법 구금돼 있던 시리아 난민 파두 씨는 올해 4월 4일, 보호소 구금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보호소 내에서 당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억울함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 지난 5개월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들어 봤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하루하루를 공포와 좌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런 신분증이 없어요, 저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한 것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올해 4월 4일 풀려났는데, 보호소 측은 제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보호소 측은 한국을 떠나라고 오스트리아로 행선지가 적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오스트리아는 현재 시리아 난민을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시리아 난민에게 비자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비자가 없으니 오스트리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호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한국에서의 체류 허가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에 갈 수도,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요, 핸드폰도 개통하지 못하고, 계좌도 못 열어요.

그리고 제가 22개월을 불법 구금돼 있는 동안 입은 피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보호소 안에 있을 때 전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어요. 지금도 누가 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을 때 폭력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구금의 불법 여부를 다루는 재판 이틀 전인 2022년 3월 16일이었어요. 보호소 측 직원들은 제가 법원에서 승소해 풀려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제가 풀려나 내부에서 겪은 일들을 외부에 폭로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호소 직원들은 저를 일부러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욕설을 하며 저를 도발했어요. 저를 계속 구금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요. 저는 당시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특별히 행동도 조심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직원들이 소포가 왔다며 저를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창고로 직원들을 따라갔는데, 자꾸 선반에 가려 CCTV 카메라가 못 찍는 위치로 저를 이끄는 거예요. 저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무슨 짓을 할 것



22개월 불법 구금, 고문 그리고 폭력 끝에 파두 씨에게 남은 것은 갈 수조차 없는 오스트리아로의 여행증명서

만 같아서 당신들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자꾸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설을 하면서 저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십여 명이 달려들어서 뒤에서 제 목을 조르고 저를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증거 자료로 확보한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일단 외국인보호소에서는 풀려나 자유를 찾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를 [방화 협박을 했다고] 부당하게 신고했던 건물주, 저를 체포했던 인종차별적 경찰, 그리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저를 폭행한 직원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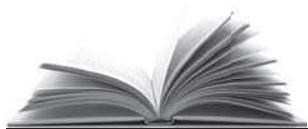
그리고 저는 시리아인입니다.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출입국·외국인청은 제 신분증조차 돌려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다른 사람들은 300만 원, 1000만 원씩 보증금을 내거나, 한국인의 보증을 받아서 풀려났어요. 하지만 저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풀려난 거예요. 저를 구금한 것이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해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출입국·외국인청은 제게 왜 신분증을 주지 않는 것인가요?

한국 정부는 제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여기에 왜 있는 것이죠? 6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국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찾았다고요? 저는 한국에서의 자유는 더 이상 원치 않아요,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 11년째 제 아이들과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박이랑



역자 서평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평등》 새 번역판 이수현 옮김, 책갈피, 268쪽, 15000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대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공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혁을 배신하자 대중은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다. 그 틈을 타서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걸고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보다 공작에 능하고 상식보다 몰상식·파렴치가 몸에 밴 자들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공공연히 칭찬할 만큼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 정도가 공정한 평가일 뿐, 한국 사회는 공정이나 평등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것이 아마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일 것이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이런저런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과 투쟁이, 또 공정과 역차별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과 갈등이 널려 있다. 그래서 서점에는 평등·정의·공정을 주제로 다룬 책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평등과 정의 문제를 다룬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만으로도 《평등》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비판적 대화

지은이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약간 독특하다. 평등과 정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과 구체적 실천을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흔히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대상으로 여겨지는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대화를 한다는 점이 그렇다.

사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평등과 정의 논의가 단지 복잡하고 난해한 추상적 이론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김범수 서울대 교수가 지은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아카넷, 2022)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벌어진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 논쟁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적용하고, 날로 심화하는 소득 격차 문제에 로버트 노직의 이론을 적용하며, ‘금수저’와 ‘흙수저’, 합법적 ‘엄마·아빠 찬스’ 문제를 로널드 드워킨이 주장한 ‘자원의 평등’ 이론으로 살펴보고, 수능 시험 같은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 문제에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평등론’을 적

용하며, 여성 할당제나 소수자 우대 정책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를 아이리스 영의 이론으로 검토하는 등 구체적 현실 쟁점에 추상적 정의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평등》3장 “평등과 철학자들”에서 캘리니코스는 바로 이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비판은 자본주의가 정의롭지 않다고 규탄할 수 있는 윤리적 원칙들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 이론적 과제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사이에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캘리니코스에게 이런 대화가 의미하는 바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자본주의의 개혁이 아니라 전복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4장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3장에서 캘리니코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결론짓는다.

계급, 근본적 불평등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불평등의 원인으로 착취에 주목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착취를 생산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결과로 본다. 사람이 착취당하는 경우는 남을 위해 일하도록 부당하게 강요당할 때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



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도록 강요당하고, 따라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생산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자유로운 교환이라는 외관을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노예나 농노와 달리 노동자는 잉여노동을 직접 강요받지는 않지만, ‘경제적 관계의 말 없는 강제’ 때문에 자본가를 위해 잉여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의 자유는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착취는 생산 자원이 처음 분배될 때 어떤 부정의(부당함)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다.

더욱이 착취는 그 결과로 이익에 대한 접근권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도 부정의에 일조한다. 에릭 올린 라이트의 말처럼 “착취하는 자들의 복리와 착취당하는 자들의 궁핍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사이의 적대관계가 계급 구조의 토대를 이룬다.

《계급, 소외, 차별》(책갈피, 2017)의 공저자 제프리 디스티 크로익스는 “착취라는 사실의 집단적·사회적 표현”이 계급이라고 한다. 계급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므로 ‘평등한 계급 관계’는 형용 모순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으로 주로 이뤄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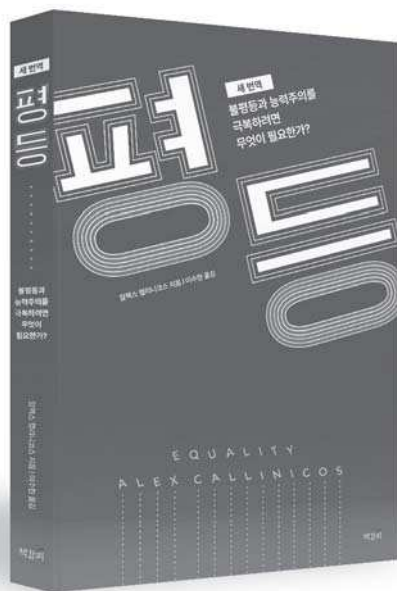
평등은 불가능하다. 캘리니코스의 말처럼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곧 혁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것이 《평등》의 “철학적 핵심”인 3장의 결론이다. 그러나 현대적 평등 사상의 기원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유주의자들의 ‘상식’과 달리 자유와 평등은 상충하는 가치나 원칙이 아니라 함께 실현되어야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2장, 불평등과 자본주의 경제구조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4장도 중요하다. 어쩌면 이 책의 결론 격이라고 캘리니코스가 말한 4장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이 얇은 책에는 중요한 주제와 논의가 많다. 예컨대 능력주의, 응분의 몫, 인센티브, 기본소득, 시장사회주의, 정체성 정치, 제3의 길, 신자유주의, 케인스주의, 세계화 등등. 물론 지면 제약 때문에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다양한 주제에 관한 캘리니코스의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자본주의는 지금 핵전쟁의 위협과 기후 재앙, 끝이 안 보이는 경제 위기와 감염병 재난으로 지구와 인류를 파멸시킬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와는 다른 대안을 찾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훌륭한 이론적 무기로 쓰이기를 바란다.

이수현





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 중 28기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20년 현재 44퍼센트에서) 2030년까지 21.2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폐쇄돼야 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탈탄소 산업 전환을 떠들 뿐, 실제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당면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줄어든 석탄발전을, 위험천만한 핵발전과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천연가스로 메우려 한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 불안은 노동자들의 당면한 실질적 문제인데 말이다. 당장 2024년부터 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한다.

이미 보령 1·2호기(2020년), 호남 1·2호기(2022년), 울산 4·5·6호기(2022년)가 폐쇄되면서 노동자 수백명이 실직했다. 그중 다수는 다른 발전소로 이직할 수 있었지만, 타지에서 일하게 되면서 조건이 악화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58명은 아예 일자리를 잃었다. 대부분은 2차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도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을 보면,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최소 4911명에서 최대 7935명이 실직하게 된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폐쇄되는 30기 중 24기는 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돼 일부 노동자(3024명)는 직무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숙수무책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애먼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 심각하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계약해지에 대한 보호망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지난해 10월 15일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던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일자리 상실 위기

그러나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와 기업주들이다. 엉뚱한 데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발전 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건 완전 정당하다.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 다수는 고용이 보장된다면 재생에너지 분야 등 다른 일자리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등 한전 계열사들의 직장을 줄이라고 거세게 압박을 넣고 있다. 공공기관들을 “방만 경영”이라고 몰아세우며 ‘혁신안’ 제출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와 지분 매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발전 공기업 6사는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비용 중 최소 2조 1751억 원 절감 계획을 내놨다. 심지어 한전 측은 석탄발전을 늘리는 ‘경영효율화’ 계획도 내놨다.

부채를 줄이려는 발전사들의 지분 매각은 가뜩이나 늦춰지고 있는 연료·환경 운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고, 문재인 정부

는 공공기관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수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 발전 노동자들은 ‘선 고용 보장 약속, 후 재취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 하락이나 노동강도 강화 등 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재취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이런 요구를 내걸고 올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들은 9월 14일부터 현장 설명회를 시작했다.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은 편인데, 설명회가 평일 낮 시간임에도 노동자 100여명이 참가하는 등 관심이 상당하다.

노동자들은 오는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에도 함께한다. 10월 말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 노동자 집회도 준비 중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신정환

온라인 토론회

노동자연대 TV

연속 토론 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9월 29일(목) 오후 8시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기자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으로 본 재벌개혁론 비판> 저자

참가신청

bit.ly/meeting-0929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 ②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10월 6일(목) 오후 8시